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33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2월 1일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김재한_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 드골과 아데나워의 브로맨스
2.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전개
 - (1) 당국 간 잦은 만남
 - (2) 과거사 인식의 공유
 - (3)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과 대응
3. 동북아시아 역사 화해의 함의
 - (1) 탈패권적 지역통합
 - (2) 과거사 기억과 미래 세대 교류
 - (3) 퍼블릭 외교와 정상 외교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김재한_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 드골과 아데나워의 브로맨스

지난 1월 22일은 독일과 프랑스가 체결한 엘리제 조약의 60주년 기념일이다. 1963년 그날, 추운 날씨 속의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과 서독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우호 조약에 서명한 후 포옹했다.

1951년 아데나워가 서독 초대 총리로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를 불신했다. 그러다가 드골이 대통령직에 오르기 직전 해인 1958년 프랑스 총리 자격으로 아데나워와 첫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두 정상 간의 브로맨스가 시작되었다.



1963년 1월 22일 엘리제 조약에 서명한 후 포옹하는 서독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왼쪽)와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
출처: https://www.eppgroup.eu/sites/default/files/styles/crop_838x582/public/photo/2013/01/elysee_0.jpg?itok=kU3Enc7v

독일-프랑스 두 정상의 만남 가운데 세상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1962년 프랑스 랭스 대성당의 공동 미사다. 드골은 성당 정문 바닥의 석판에 “아데나워 총리와 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다짐하기 위해 당신의 성당에 왔습니다” 1962년 7월 8일 일요일 11시 02분 샤를 드골이라고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새겼다.

당시 언론은 두 정상의 서약을 ‘세기의 사랑’ 또는 ‘세기의 결혼’으로 묘사하였다. 아데나워가 한때 시장을 맡았던 쾰른시의 신문 만평은 비스마르크 수상,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1세, 루이 14세, 샤를마뉴 대제 등 양국 숙적 관계의 주역부터 통합시대의 황제까지 결혼식 하객으로 그리며 환영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엘리제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화해하였다. 양국 역사 화해의 진전을 회고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합의를 찾아보자.



프랑스 랭스 대성당 정문 바닥의 석판
출처: 위키미디어



“Die Hochzeit zwischen Michel und Marianne”(독일 신랑과 프랑스 신부의 결혼식) Klaus Pielert, Kölner Stadt-Anzeiger (쾰른시 홍보신문) 1962
출처: <https://tageswoche.ch/wp-content/uploads/2012/07/imagescms-image-000083601-1180x663.jpg>

2.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전개

1) 당국 간 잦은 만남

60년 전 엘리제 조약은 외교, 국방, 교육,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과 당국 간 잦은 만남을 규정하였고, 오늘날에도 만남과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2003년 엘리제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국적을 인정하고, 각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10년 프랑스 재무상이 독일 각료 회의에 처음 참석하며 그 약속은 지켜졌다. 또 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로 프랑스 베르사유궁 극장에서 합동 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참석하였다. 베르사유궁은 1871년 독일이 프랑스에 승전하고 제국 출범을 선포할 때, 1919년 프랑스가 패전국 독일에 전쟁 배상을 강요하는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 양국이 치욕과 설욕을 주고받았던 역사의 현장이다. 또 2013년 엘리제 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합동 각료 회의와 합동 의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1월 22일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개최된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 기념식에는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를 비롯하여 양국 각료 30여 명과 양국 의원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엘리제 조약 체결 기념식장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기뿐 아니라 유럽기(유럽연합 상징기)가 함께 게양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 기념식

출처: Picture Alliance -DPA, https://www.deutschland.de/sites/default/files/styles/crop_page/public/media/image/392202467.jpg?itok=JwBk_97X

되었다. 양국 정상은 엘리제궁에서 합동 각료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직후 셀카를 찍으며 화해 분위기를 과시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이 모든 사안에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마다 양국은 조율과 협력을 거듭하며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합동 각료 회의 후 기념사진

출처: 마크롱 트위터, <https://pbs.twimg.com/media/FnGRcjdxGA-EzDPz?format=jpg&name=900x900>

2) 과거사 인식의 공유

당국 간의 잦은 만남 외에 양국 국민 간 교류도 추진되었다. 엘리제 조약 이전 양국은 역사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나폴레옹 1세와 비스마르크 수상은 각각 자국의 교과서에서 영웅으로 평가되었지만 상대국 교과서에서는 원흉으로 기술되었다. 또 나폴레옹 3세의 독일 견제 정책은 독일 교과서에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부당한 간섭이자 위협으로 서술되었으나 프랑스 교과서에는 프랑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당연한 위기 대비책으로 평가되었다. 상대가 시작한 전쟁은 침략 전쟁이고, 자국이 시작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묘사된 것이다.

엘리제 조약 이후 과거사 인식에 대한 양국의 공유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은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양국 역사 교과서 협의회의 ‘1987년 권고안’은 나치에 대한 독일인의 저항 활동을 담았다. 또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영국의 독일 복구 계획에 반대했으며, 자르 지역을 독일에서 분리하고 루르 지역을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프랑스가 독일 위협을 예방하려 그렇게 시도하였다는 맥락도 담았다. 2006년 양국 정부 주도하에 출간된 첫 공동 역사 교과서는 각 부 뒷부분에 ‘독일-프랑스의 교차 시선’이라는 내용을 넣어 양국 간의 견해 차이를 설명하였다. **양국의 인식 차이를 외면하지 않고 상대 입장을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참혹한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65년 독일-프랑스 청소년사무소를 설립하여 청소년 교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60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각종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양국 합동의 중고등학교와 연합 대학교도 설립해 운영하였다. 상대국에서 일하는 국민 수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 간 화해는 국내 정치와 법 제도로 보완되어야 지속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많은 독일인이 나치의 탄압을 받았고, 나치에 희생된 독일인을 피해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적은 독일인이 아니라 독일을 짓눌렀던 권력과 이념이라고 천명했다. **독일 통일 전 서독 정부와 통일 후 독일 정부는 확고**

한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지금까지도 나치의 전쟁 범죄를 법률로 단죄하고 있다. 나치와 같은 극단적 정권이 흥했다가 망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양국의 역사 화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3)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과 대응

독일-프랑스 화해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숙적 관계는 양국이 각자 유럽 패권을 차지하려던 19세기 내내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걸쳐 두드러졌다. 이러한 숙적 관계는 오래된 적대 관계를 의미하지, 영원한 적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이 패권을 추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다시 패전국이 되었고, 프랑스 역시 전쟁 중 독일에 정복당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전후 질서에서 서방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전승 연합국에 포함했을 뿐이었다. 유럽 대륙에서 패권국을 자처하던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등장으로 패권국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소련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엘리제 조약은 독자적 지위나 역할을 확보하려는 드골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조약 초안에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을 언급하지 않은 탓에 미국의 반발을 산 서독은 조약 문건에 미국과 서독의 기존 관계가 엘리제 조약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후에야 의회 비준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대서양 중심의 유럽보다 대륙 중심의 유럽을 더 원했다. 따라서 영국이 1962년과 1967년에 EEC와 유럽공동체(EC)에 각각 가입하려 했을 때 프랑스가 거부하였고, 영국은 1973년이 되어서야 EC에 가입할 수 있었다. 물론 오늘날 영국은 유럽연합(EU)을 스스로 탈퇴했으나 견제나 몸집 키우기가 아닌,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일 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해도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악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서독 루르 지역의 생산 규제를 해제하려 하자 프랑스는 처음엔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로베르 쉬망 프랑스 외무장관이 유럽 결속의 취지에서 초국가적 기구를 통한 석탄 및 철강 산업의 공동 관리를 선언했다. 이듬해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이를 수락하여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발족하였다. 이후 ECSC는 EC를 거쳐 EU로 진전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유럽 지역공동체의 진전과 그 궤를 함께 했다.** 양국의 숙적 관계는 탈(脫)패권적 지역공동체 설립이 추진되며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3. 동북아시아 역사 화해의 함의

1) 탈패권적 지역통합

프랑스-독일의 역사 화해가 오늘날 대립적 관계로 점철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함의하는 바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역 패권을 지향하는 의지와 힘을 갖춘 국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화해 진척을 가로막는 요소다. 동북아시아는 이미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직후 각각 중국과 일본의 패권적 통합을 경험했으며, 이는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화해 또는 통합의 선결 조건 중 하나는 위협 부재다. 프랑스-독일 사례에서 상대가 자국을 위협하거나 도발할 이유가 없다고 인지했을 때 화해가 진전되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는 타국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각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다 보니 관념적 감성을 넘어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역사 화해 또는 통합을 이루려면 강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가 이웃 국가에 대한 압력 행위를 자제해야 하고, 도발적 이미지의 국가는 군비증강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각국은 타국을 위협하는 요인을 스스로 제거해야만 자국에 대한 경계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적대 관계를 벗어나 화해할 상대국은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는 탈패권적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각각 예속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화해와 통합은 피해자가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역내·외 국가들의 이견을 조정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2) 과거사 기억과 미래 세대 교류

역사 화해는 과거를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과정에서도 역사 교과서 공동 집필, 역사적 갈등 현장 공동 참석 등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화해의 진정성은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에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가 주도하는 것이다. 정부, 시민 단체, 심지어 후손 등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반면 가해자 측은 후손이나 정부가 사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왜 식민 지배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후손들이 사과해야 하나’라고 하는 강변은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한일 역사 공동연구, 중일 역사 공동연구, 한중일 역사 부교재 공동개발 등의 사업**

이 추진되었다. 2001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한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3년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어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년 6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2010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6년 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발족한 중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한국 입장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비판받기도 하였다. 이외에 한국·중국·일본이 참여한 역사 부교재 공동개발 사업도 성과를 내긴 하였으나 동북아시아 화해를 촉진할 정도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과거사 인식 공유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장장 80여 년 동안 추진된 독일-프랑스 교과서 협력을 참고하면, **동북아시아 공동 역사 교과서 사업이 조급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역사 화해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다. 과거를 외면하거나 망각하면 진정한 화해는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를 직시하여 오해를 풀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견해차를 인정하며, 반성과 용서가 이루어질 때 화해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과거사로 현재 관계가 나빠지는 만큼이나 현재 관계의 악화로 과거사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은 관계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해야 하고, 동시에 나은 미래 관계를 조성하여 현재 상황이 미래의 갈등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보편적 관점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의 인식 공유를 위한 청소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퍼블릭 외교와 정상 외교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승 연합국은 독일에서 국수주의적 정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 동북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정권 획득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사 문제가 부각할 때마다 대외 강경파가 득세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유럽처럼 동북아시아에서도 과거사를 반성하는 세력이 힘을 얻도록 주변국이 노력해야 한다. 상대국 국민 전부를 적대시하는 태도보다는 상대국 내 합리적 목소리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 군‘위안부’ 문제 역시 **민족주의적 접근보다 인간안보의 가치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 화해에는 전통 외교보다 퍼블릭 외교가 효과적이다!¹

1 이 글에서는 public diplomacy를 중국처럼 공공(公共) 외교로 번역하지 않고, 일본처럼 퍼블릭 외교로, 아니면 공중(公衆) 외교로 번역한다. 이는 ‘공공 외교’라는 용어를 민간 외교가 아닌, 정부 단위의 official 또는 공식(公式) 또는 공무(公務) 외교로 이해하는 대중(public)이 여전히 많아서이다. 용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재한, 『문화의 전략 그리고 외교안보』, 최진욱 외, 2021, 『신 외교안보 방정식: 네트워크 경쟁과 전략문화』, 전략문화연구소, 23쪽.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는 문화·관습의 기원을 둘러싼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문화 갈등의 한 축일 수밖에 없는 국가는 중국이다. 고대 로마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럽을 지배했다고 해서 오늘날 이탈리아가 서양 문화의 요소 각각을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특정 문화·관습을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자국의 배타적 소유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 화해에 역행하는 것이다. 일국의 민족주의 강화는 타국의 민족주의 강화를 동반하고, 반대로 탈(脫)민족주의적 노력은 타국의 탈민족주의화로 파급될 수 있는데, 전통적 외교와 달리 퍼블릭 외교는 탈민족주의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

일반대중을 중시하는 퍼블릭 외교의 정반대 극단에는 국가지도자 중심의 정상 외교가 있다. 극과 극이 통한다는 점에서 정상 외교 역시 퍼블릭 외교와 마찬가지로 탈민족주의적 역사 화해를 도모할 수 있다. 독일-프랑스 화해는 양국 정상의 의기투합이 맺은 결실이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화해에도 국가 정상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드골과 아데나워 모두 민주국가 지도자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외 갈등보다 화해가 지도자에게 더 나은 정치적 선택일 가능성은 전제국가보다 민주국가에서 더 크다. 이는 민주평화론의 논리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민족주의자 대신에 탈패권적 아시아주의자 또는 국제주의자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전제국가보다 민주국가에서 더 크다.

숙적 관계의 화해는 다자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때가 많다. 함께 협력해야 할 제3국뿐 아니라 함께 견제할 제3국의 유무도 중요하다. 드골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에서 독자 노선을 모색하던 중에 독일과의 화해를 추진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현존하는 상호 위협이 거의 없는 민주국가끼리는 화해를 도모할 만하다.

물론 민주국가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화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민주국가 지도자는 화해보다 대외 갈등이 자신에게 더 나은 정치적 선택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또 역사 화해 추진이 비(非)민주국가의 지도자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동북아 국가지도자들이 역사 화해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때 동북아시아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시아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